

의안 번호	899
----------	-----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2. 4. 5.(목)
- 제 출 자 : 고호근 의원 외 4명
- 위원회회부 : 2012. 4. 9.(월)
- 위원회심사 : 2012. 4. 16.(월)

2. 개정이유

2012. 1. 17일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대형마트)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
-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(안 제13조의2제1호)
 - 의무휴업일은 중구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함(안 제13조의2제2호)
- 나.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구 관내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경우 사전에 입점예고 및 입점지역,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조문 신설(안 제14조의2 내지 3)

4. 근거법령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
-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7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
 - ▶ 2012. 1.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· 공포되었고
 - ▶ 2012. 2. 7일부터 2. 27일까지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입법예고 하였으며
 - ▶ 2012. 2. 2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바 있음
 - ▶ 2012. 3. 5일 정현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
 - ▶ 2012. 3. 16일 제14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시 홈플러스 울산점을 방문하여 홈플러스 울산점장, 이마트 학성점장, GS리테일 태화점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
 - ▶ 2012. 3. 19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시행령 미공포, 주민의견 수렴

- ▶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
 - ▶ 2012. 3. 28일 각동 주민대표와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를 한 바 있고
 - ▶ 2012. 4. 3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2. 4. 10일 공포되었음
- 타구군의 개정동향을 보고 드리면
 - ▶ 남구는 2012. 4. 19일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, 동구는 4. 24일, 울주군은 3월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시켜 4. 30일 재심사할 예정임 북구는 지난 3. 13일 수정가결 되어 5. 1일부터 시행예정임
- 타구군의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
 - ▶ 영업시간제한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
 - ▶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규정함
- 다음은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의원으로부터 2012. 4. 5일 공동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
 - ▶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제 실시는 타구군과 동일하며
 - ▶ 대규모점포등을 지역내 개설할 경우 입점예고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고
 - ▶ 필요할 경우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. 6일부터 4. 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
 - ▶ 주민의 의견은 제시된 바 없었고, 대규모점포등에서 시행일에 관하여 문의한 바 있음
 - ▶ 또한 4. 10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은 법제처의 의견과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근거로 안 제14조의2와 안 제14조3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에 위배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음
- 검토의견으로는
 - ▶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”로 되어 있고
 - ▶ 위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점예고 및 조정권고 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 법제처에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여부를 질의한 결과
 - ▶ 입점지역, 시기 및 규모 등을 예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예고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 또는 기타 불이익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지도 또는 행정협조 요청 차원의 임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
 - ▶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
-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의견은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
 - ▶ 입점예고 사전통보 및 입점지역 등에 관하여 조정권고하는 조문은 삭제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음
- 위 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